

1999년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전 병 성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I. 머리말

1998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해였다. 97년 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IMF하의 경제체제는 혹독한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은 수많은 셀러리맨을 거리로 내 몰았다. 도산, 실직, 감원, 명퇴라는 말들이 어느 때 보다는 자주 그리고 실감나게 주변을 맴돌았던 한해였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암담하기만 했던 '98년의 겨울이 가고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99년의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이제는 IMF의 그늘도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도 보인다. 정말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99년에는 환경정책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해,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뜻 있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98년은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환경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흔히들 말한다. 한 나라의 환경수준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이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미래위원회(Future Commission)는 21세기는 3개의 목표가 하나의 길로 가는 "Three Way One Path"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3개의 목표란 다름 아닌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의 증진,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 실현,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의 확보이다. 이와 같이 환경은 곧 21세기가 지향해야 할 3대 목표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도 환경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현재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국토개발, 경쟁력증진이라는 이유로 환경을 소홀히 한 대가라고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터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환경은 반드시 보전되고 복원되어야 한다. 성장일변도의 경제체제(growth-led economy)는 인간중심의 경제체제(human-centered economy)로 탈바꿈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99년이 지향해야 할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II. 환경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1. 그간의 환경정책의 평가

그 동안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며 깨끗한 공기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실천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틀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환경정책의 한계를 살펴보면, 우선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규제위주로 이루어져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도 단속 등 직접규제수단을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염물질을 사후에 처리하는데 치중하여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국토개발, 에너지 등 각종 경제정책 수립시 사전에 환경을 배려하는 기능이 미흡하였다. 사회화의 경우처럼 주변 환경용량에 대한 배려없이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후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환경정화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진해온 경우 수자원에 대한 저가정책은 자원의 과소비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약화시켜 취약한 산업구조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연환경보전, 물관리 등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부족하였다.

넷째, 그 동안 지속적인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인프라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는 GNP대비 0.019%로서 선진국의 0.03~0.05%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국내 환경질 개선과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99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환경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의 목표는 모든 생태계의 자연적 균형이 위협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건강한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건강한 환경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 후손이 최소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도의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번영, 환경질 그리고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는 정부, 기업 그리고 모

든 국민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즉 정부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원절약적이고 자원순환형인 사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위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국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생태계의 자연적,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 보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환경정의의 실현시키고 환경책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환경법규 정책이 국민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환경적 약자가 배려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환경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환경적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내 외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방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환경기술개발과 환경관리 과학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환경위해를 최소화하고 세계환경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환경개선은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한 자료, 체계적 과학에 근거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III. 99 환경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1.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 통합 도모

그 동안 우리는 개발사업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많은 사회비용이 초래되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화호의 건설일 것이다. 당초 시화호는 담수호를 건설하여 시화공단의 공업용수와 인근지역의 농업용수로 이용코자 하였으나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담수호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고려를 통합시킴으로써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및「사전환경성평가」를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개발과정은 물론 입지선정단계부터 환경성이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개발하여 농업, 교통, 개발, 고용 등 경제 사회정책 모든 분야에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환경친화적사회로의 지향, 각 주체의 환경책임제고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더욱 면밀히 하여 개발로 인한 사회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상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정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등 시장유인적 수단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물관리 정책의 획기적 개선

'98년에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즉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수변구역의 지정, 하류지역에 원수부담금을 부과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지원 대책의 마련,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대폭적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러한 팔당 특별대책의 시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98년 중 시행된 낙동강 수질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낙동강 유역의 수질보전종합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료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정부의 재정부담과 물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절수형 수도기기와 중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물 절약형 생활패턴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에 2,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700억원을 들여 공단폐수처리장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수공정의 현대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도 약 2,400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지하수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관리전선망을 정비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제한하고 효율적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3. 환경과학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유도

정부는 자원·에너지 집약적이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산업 위주에서 과학·지식·기술 집약적이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청정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청정기술은 환경보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win-win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정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98년에는 UNEP와 공동으로 국제 청정기술회의를 개최하고 「청정기술에 관한 국제성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금년에는 청정기술이 더욱 확산·정착되도록 G-7 기술개발사업과 신기술평가 등 기술개발업무를 더욱 강화 할 것이다. 특히 울산과 여천에 신설된 지역환경기술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실용가능기술이 개발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G-7연구개발사업,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 등에 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최선의 과학과 유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정책이 수립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유역별 수질관리체계 및 자연생태계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환경

산업육성을 위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범위를 제조업 및 대기업 중심에서 건설업·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환경마크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이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고 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을 줄여나가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촉진시킬 것이다. 즉 환경관련 산업과 환경과학기술을 2000년대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시설설치자금을 지원(500억원)하고 기초시설의 기술진단, 신기술평가사업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4. 자원절약적,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정착

최근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재활용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수입펄프, 고철의 원화표시가격이 약 60% 이상 상승되고 국내폐지가격도 약 40~50% 상승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재활용품 의무구매를 확대하고 중고물품 교환과 알뜰시장을 활성화시켜 재활용품 수요기반을 조성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재활용품 가격변화 재고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제 실시, 「재활용품판매지원센터」설치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품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높여나갈 것이다. 특히 폐기물 통합재활용체계의 도입하여 제품생산자에게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감량화 우수사업장 지정을 확대하고 종량제 적용대상 일반폐기물 발생사업장(1일 300kg이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 의무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을 확충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환경개선은 물론 수입농산물 감소에 따른 외화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위생처리기반 확충에 540억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220억원,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670억원, 재활용

증진에 1,244을 각각 투자하여 폐기물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5.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반 구축

오염물질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오염물질 처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선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며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오염물질 처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벤젠, 톨루엔 등 항목을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다이옥신 등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NOx, VOC, 다이옥신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시킬 것이다.

셋째, 자동차 증가 등에 따른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총 자동차대수의 29%(97)에 불과하면서도 오염물질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벤젠, 방향족화합물 등의 자동차 연료품질기준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 자동차에 대한 청정연료의 사용 확대, 청정연료 사용지역과 의무사용 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적극 노력할 것이다.

넷째, 지역별 유역별 호소별 수질관리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물금 등 2급수를 초과하는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지역을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오염원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하천구간별 목표수질 기준을 재조정하여 유역별 수질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상수원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해 낚시와 가두리 양식장 운영을 제한도록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35,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독물 저장, 보관, 수송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신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TRI)」를 실

특집

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파악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할 것이다.

6. 생태계의 자연적, 지역적 균형성 유지 보전

자연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환경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지의 특성, 환경 용량, 현재와 장래의 활용도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국토환경관리계획이 수립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습지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포늪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보전대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공원 조성 등 생태계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의 생생한 생태계를 촬영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도록 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하여 백두대간 등 생태계 단절지역을 복원하고 폐금속광산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등 오염토양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숙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형 하천 정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간조성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할 것이다.

또한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감소추세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유입종에 대한 국내 유입심사를 강화하고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위해 외래 동 식물의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계 위해 생물종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자연훼손지 복구, 보호사업 확대, 자연자원조사 등을 통해 공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 사전예약제 도입, 자연휴식년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공원의 보존과 친자연적 탐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를 축소하고 자연보전지구를 확대하는 등 보존위주의 공원을 지향하고 국립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을

재정비하여 공원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7.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제2의 국토 조성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해 해양을 제2의 국토로 만들기 위해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적조상습발생지역, 오염우심해역에 대한 정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이상 유조선은 전용항로 통행을 의무화하고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갯벌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해양연구소에 의하면 갯벌은 논지보다 3.3배의 생산성이 있다고 하나 생태학자들은 수십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무분별한 간척사업도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전대책이 강구되도록 할 것이다.

8.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환경보전 노력 강화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가 없다. 따라서 범국민적, 범정부적인 참여와 관심, 즉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교통, 에너지, 국토개발, 농업, 레크레이션,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환경부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스스로 정책결정, 정부조달, 시설관리 및 정부운영상 환경성과를 증진시키는 Green Government (녹색정부)를 지향할 것이다. 선진국 들의 경우 정부의 환경친화성 제고는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유도하여 지방중심의 환경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성공적인 지역환경관리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기업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에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 의한 자율환경감시체계를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9. 지구환경보전에의 능동적 참여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97.12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감축에 합의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98.11월 제 4차 당사국회의에서는 다시 개도국인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뜻을 보임에 따라 개도국,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압력이 더욱 거세어 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준비없이 선진국의 압력으로 온실가스를 불가피하게 줄여야 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업무분담체계, 협의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지구환경 보전 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각 부처의 분야별 세부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지구온난화방지종합대책” 수립 추진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지구환경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 및 외교적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Think Tank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10. 환경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

98년 중에는 환경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부내에 「규제심사분석반」을 구성하여 각종 환경규제사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조정한 바 있다.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환경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불필요하고 과다한 중복규제들을 재조정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개선이 시급하거나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환경시책 및 기준은 재검토하여 추진시기와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다.

또한 규제중심 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산업체가 환경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산업적 특성과 환경실태가 유사한 업종별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자율 추진토록 하는 업종별 자율환경관리방식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분야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간참여를 촉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부담도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환경신기술평가, 자동차 성능검사 등에 대한 민간위탁도 점차 확대할 것이, 환경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IV. 맺는 말

“農事는 1年之 大計요 教育은 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千年之 大計”라고 할 수 있다. 지나온 천년기는 환경과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힘써온 시대였다. 그 결과 물질적 풍요로움은 크게 성취하였으나 후세의 삶의 터전인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호르몬문제 등 도처에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30-40여년간의 개발 드라이브정책은 물과 공기, 쓰레기, 토양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99년은 20세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난 1000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새로운 천년기는 물질적 풍요로움 뿐 만아니라 환경적 쾌적성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며 99년은 이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모든 국가 정책이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사전예방적 환경행정의 확립, 환경과학기술의 증진, 환경투자의 확대 등 환경행정추진체계의 획기적 강화가 필수적이다.